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 논란을 다시 생각한다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주 현 태

언론사 대학평가는 대학평가결과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특히 매년 실시되는 언론사의 대학평가결과를 해당 언론사가 자사의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각 대학들은 언론사 대학평가결과로 나타나는 대학순위의 변동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각 대학은 언론사 대학평가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심한 경우 대학이 극심한 내홍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으로 하여금 언론사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행·재정적 역량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사의 대학평가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일보가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대학평가를 벤치마킹해 1994년에 처음 시작하였다. 조선일보는

2009년부터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사와 함께 대학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0년부터 대학지속가능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아일보는 2013년에 취업률을 핵심 평가 잣대로 삼아 대학평가에 뛰어들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경향신문은 각 부문별 순위를 공개하고 있으며 동아일보는 최우수, 우수 등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언론사들은 근년에 들어 대학평가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언론사 대학평가의 과잉시대를 맞고 있다. 대학평가를 실시하는 언론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대학들의 현실적인 부담과 대학교육 본질의 훼손에 대한 우려로 평가대상인 대학 쪽에서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사 대학평가 논란의 출발점

언론사 대학평가와 관련한 논란의 출발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가 대학평가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유인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가 대학순위매기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언론사 대학평가가 순위매기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만 하는 모든 대학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절대다수의 대학들은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언론사 대학평가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대학평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하에서는 언론사들은 어떤 행태로든 대학평가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이익 창출의 기회만 주어지면 신규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언론사도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강제로 금지시키기는 현행법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학입장에서 보면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지만 일부대학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즉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대학서열을 파괴하고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일부대학들은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보여주는 순위 상승을 매우 강력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대학서열을 매기는 데 대해 반대하거나 또는 기존의 대학서열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대학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대학평가 수요자들에 대한 언론의 파급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언론사 대학평가결과로부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사 대학평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

언론사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에 대한 비판은 매년 불거져 왔는데 급기야 2010년에는 전국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언론사 대학평가를 반대하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언론사가 주관하여 시행 중인 대학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대학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서열화에 치중하며, 대학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육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들은 대학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저해함으로써 대학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학교육의 질 개선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관련학자 및 주로 진보성향단체들이 여러 지면 및 활동을 통해 제기한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평가에서 항상 지적되고 있는 부문으로 언론사 대학평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의 타당성 문제이다. 과연 평가지표들이 대학이 수행하는 교육과 연구의 본질적 측면을 제대로 포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언론사의 평가지표가 각 대학별 특수 상황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대학별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평가하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 대학평가의 평가지표로는 이공계 중심대학으로 연구비 수주액이 많고, 논문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순위평가가 공정하려면 동일한 특성을 가진 대학들끼리 비교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종합대학, 전국특성화대학, 지역종합대학 및 지역단과대학 그룹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평가 되어야 한다.

평가지표가 모든 대학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려면 공정해야 한다. 개별 대학들의 특성에 따라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그 역할이 상이한데 이에 대한 고려없이 특정 평가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평가 관련자사이에 평가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비판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지표 측정방법 특히 설문 응답자의 과도한 편중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나아가 설문문항을 제시하는 방법 즉 설문지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언론사가 제시하는 대학평가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을 발굴하여 간판 위주의 기존 대학서열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현재의 언론사 대학평가는 순위매기기에 나섬으로 기존 서열을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특성화를 유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보다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사 대학평가의 유용성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언론사 대학평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할 대학을 선택할 때,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원을 선발할 때, 대학경영자가 대학을 경영할 때, 그리고 대학교육의 정책담당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언론사 대학평가는 교육의 질을 올리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을 발굴·소개함으로써 실력보다 간판위주로 고착화되어 있는 한국대학의 위계질서를 타파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언론사 대학평가가 외부에서 대학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제대로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되면 대학들의 올바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사 대학평가 실시는 우리나라 대학들에게 대학정보의 다양한 수요자들 앞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열린 환경이 도래되었음을 알리고, 단기간 내에 대학들이 그러한 열린 경쟁환경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기여를 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지만 언론사 대학평가를 의식한 대학들의 노력에 의해 대학의 교육여건 연구력 등이 일정부문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사 대학평가 논란을 보는 또 다른 시각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많은 비판과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대학순위매기기에 뛰어드는 언론사 수는 증가해 오고 있으며 순위매기기 산업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학평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급측면 즉, 언론사에 대한 비판을 통한 공급측의 행태에 관한 관리에서 이제 수요측면을 동시에 주목하고 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생산하는 순위정보에 대한 최대수요자의 한축은 대학경영자이다. 대학경영자는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순위정보를 대학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순위 상승을 대학경영의 주요한 성과로 내세우고자 한다. 대학경영자가 이러한 대학순위 정보 활용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언론사의 대학평가 순위매기기산업 진입 동기도 감소할 것이다.

논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언론사 대학평가를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 문제점들을 완화 내지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대학평가를 실시하는 언론사가 좀 더 공익적 책임감에 충실하기를 촉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평가의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대학자신과 대학교육정책을 담

당하고 있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전적인 조치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거론되고 있는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언론사 대학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평가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종합순위를 매기는 방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표가 공정하고 타당해야 하며, 양적 산출물 중심이 아니라 과정중심으로 질적 평가도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언론사들도 단순히 종합 순위를 매기는 상업적 목적의 흥미유발식 행태에서 점차 벗어나 대학평가 원래의 사회적 교육적인 목적에 좀 더 다가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최초의 언론사 대학평가인 중앙일보의 종합 점수에 의한 순위매기기에서 최근에 대학평가사업에 뛰어든 동아일보 및 경향일보는 한 줄 세우기를 지양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진일보된 행태라고 본다.

현재의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해 대학평가의 이상적인 당위성을 강조하며 비판만 한다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되풀이 될 가능성이 명백하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상업적 수익구조를 포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또한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언론사 대학평가결과의 강력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대상자인 대학 또는 비판그룹에서 아무리 언론사 대학평가가 부당하다고 소리쳐도 대학평가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언론사의 대학평가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사 대학평가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즉 언론사 대학평가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 대학경영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적인 부문은 정부가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대학평가를 그 목적에 맞게 설계하여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다양한 측면의 평가결과정보가 수요자 특히 학부모 수험생 기업체에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면 언론사 대학평가는 여러 대학평가 중 하나로서 대중적 흥미를 더하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충분히 제기되어 왔고 대학평가의 비판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왔다. 지금부터는 문제제기에서 나아가 발전적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대학평가정보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인식된다면 지금까지의 논란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과 평가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은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목적과 평가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대학 평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대학평가의 전반적인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일리가 있으므로 언론사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언론사 대학평가를 대학평가라는 큰 흐름의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학평가정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올바른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요자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대학평가정보 수요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면 언론사 대학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지금과 같은 전체 순위매기기를 계속하는 한 정보로서의 가치는 점점 감소할 것이다. 문제의 해결점은 대학평가결과가 얼마나 수요자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필자소개

주현태 |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아이오와대학교에서 MBA학위와 경영학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산업연구원 연구원,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방문교수, 경영혁신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교육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인천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위원, 외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